

주간 통일정세

2015-36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국군포로
6.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박 대통령 상하이임정 재개관식 참석 비난(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역사학학회 대변인은 11일 담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승만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며 상하이임정의 법통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의 재개관식 참석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저들의 반역적 정체를 분칠하고 그 누구의 지지를 얻어보려 한다면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 밖에 차려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대변인은 상하이임정에 대해서도 장제스(蔣介石·1887~1975) 국민당 치하에서 간신히 존재해 왔다고 폄하하며 진정한 항일투쟁은 김일성 주석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박 대통령 방중 발언 비난…“정세흐름에 역행”(9/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귀국길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해외행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무슨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하였다”면서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너무도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언사”라고 비난함.
 - 매체는 “조국통일은 외세와의 그 어떤 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과 남이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실현해야 할 민족적 중대사”라며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움.
 - 또 “지금 북남관계는 살얼음장과 같은 상태”라고 진단하고 “가시박힌 말 한마디, 무례한 행동 하나로도 합의가 휴지장이 되고 북남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갈수 있다”고 경고함.

- 북한, 박 대통령 ‘통일외교’ 비난…“체제통일 구걸질”(9/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통일외교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에 대해 “최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통일외교에 대해 떠들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함.
 - 논평은 특히 “일족즉발의 위기를 가까스로 털어버린 현 북남관계에서 이런 언행은 매우 위험하다”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관계 개선의 길에 어렵게 들어선 북남 사이에 다시금 극도의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는 용납못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임.
 - 논평은 “그들이 통일외교 타령을 늘어놓으며 지지와 이해를 얻는다 어쩐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들의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계책에 대한 외세의 승낙을 받자는 역겨운 구걸질”이라고 비판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북한,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 남측보다 24분 늦게 보도(9/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과 8일 판문점에서 있었다”며 “접촉에서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합의서에 의하면 북과 남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 적십자 회담을 열고 호상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정권 수립 67주년 맞아 ‘8·25 합의’ 이행 강조(9/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9일 사설에서 “전체 조선 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주문함.
 - 신문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며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 투쟁으로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우리민족끼리도 정권 수립을 기념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자주통일의 기치 따라 전진해온 공화국의 자랑스런 연대기’ 등의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고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2010년 이후 지상·해상·공중서 64차례 대남도발(9/10, 연합뉴스)
 -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사례는 지상 13회, 해상 47회, 공중 4회 등 64차례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남북, 경제·사회문화 분야로 교류와 협력 확대하자”(9/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북남합의가 빛을 보자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무리 좋은 합의라고 하여도 그에 따르는 실천이 없으면 빛을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문함.
 - 매체는 “북과 남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면 대화 분위기를 공고히 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다”며 지난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와 다음달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을 “좋은 전례”라고 평가함.
 - 매체는 “온 겨레는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 교류의 물고가 하루빨리 터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말로는 합의 이행을 떠들면서 신중성을 기한다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만나 동포애도 나누고 이해를 증진한다면 화해와 단합의 거대한 대하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펼쳐 민족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북한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태권도 함께 참가해야”(9/11, 미국의소리)
 - 북한의 장웅(77)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태권도연맹(ITF) 종신명예 총재는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를 두고 IOC,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함.
 - 장웅 위원은 ITF의 독자적인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ITF가 WTF 모자를 쓰고도 레슬링처럼 두 개의 종목, 두 개의 세부종목으로 늘리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그는 이어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도 도쿄올림픽에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IOC와 WTF와 논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태권도 남북교류와 관련해 그는 “WTF 측에서 먼저 초청을 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답장을 보냈다”면서 “국제태권도연맹이 서울에 가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평양에 오는 양측 교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고위급 합의, 남북 평화수호능력 보여줘…미군 철수해야”(9/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담화를 통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 주둔의 해묵은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최근 남북이 교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위험천만한 사태’를 맞은 것도 미군이 투입된 을지프리트가디언 합동군사연습 기간이었다며 “합동군사연습은 조미(북미) 사이뿐 아니라 북남 사이의 대결과 불신도 격화시키는 기본 요인”이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특히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속 벌이는 한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원인 모를 사건이 터지거나 그로 인해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지난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국제공동체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며 “미국은 남조선 강점이 시대착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일본경찰 조선총련 압수수색’ 연이틀 맹비난(9/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일우호친선협회와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는 9일 각각 대변인 담화를 통해 “파쑈적 탄압”, “횡포무도한 폭거”라며 일본 당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압수수색이 “위법단체, 범죄단체의 모자를 씌워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서 말살해버리자는 데 악랄한 목적이 있다”이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일본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가 질식되고 민족배타주의가 활개치는 세계최악의 범죄국가, 가장 악랄한 전범 국가라는 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도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탄압 책동”으로 규정했다고 9일 통신은 전함.

■ 북한, 유엔 북한인권토론회 비난…“정치적 도발 책동”(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30차 회의 기간 적대 세력들은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공화국을 비난하는 놀음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함.
-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에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다”며 “미국은 이란 핵문제 타결 후 우리의 인권문제에 집중하며 인권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유엔 무대를 악용해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함.
- 오히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 등 서방의 이주민 배척이나 종교 탄압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어 “우리나라에는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적 제도가 수립돼 있다”고 항변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주한미군 주둔 70년 맞아 미군 철수 촉구(9/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조선반도가 핵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짙게 떠도는 열점 지역으로 된 것은 바로 남조선 강점 미군과 남조선 강점 정책,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당장 제 소굴로 쫓아 보내야 할 범죄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주한미군이 흉악 범죄에 더해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적인 이자 소득을 위한 밀천으로 도용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함.
 -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에서 을지프리트미가디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이야말로 대조선 침략에 환장한 미치광이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는 정세 악화의 주범”이라고 비난함.
- 북한 “미국이 남북긴장 획책...8·25합의 이행 중요”(9/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반통일 세력의 준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란 논평에서 “미국은 전 미 국방장관, 전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 등을 내세워 ‘북의 추가 핵시험 가능성’ 여론을 내돌리면서 (남북 간) 긴장을 획책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함.
 - 신문은 지난달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한 기자회견과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가 기고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북남 사이에 이간을 조성하고 현 정세 흐름을 돌려세우려는 흉악한 목적”이라며 “미국의 반통일 책동이야말로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실현의 근본장애”라고 성토했다.
 - 신문은 8·25 합의와 지난 8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예로 들며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추동해 나가는 데서도 얼마든지 손을 맞잡고 긍정적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세계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은 미국”(9/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말살되고 있는 인권 범죄국들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인권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선택적인 나라에 정치적 압력과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으로 처벌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함.
 - 남조선인권대책협회도 7일 발표한 조사통보를 통해 효순·미선 사건 등 미군의 범죄를 나열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사는 일제의 구식민지통치사에 이은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역사”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중국, 김정은에 정권수립 축전…북한, 시진핑 축전 ‘홀대’(9/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 북한 지도부에 축전을 보내왔다고 보도함.
 -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우리들은 조선측과 함께 중조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러나 중국의 ‘관계 개선 제스처’에 노동신문은 북한의 ‘3대 친선국가’로 꼽을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쿠바로부터 온 축전을 소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축전은 신문 1면에 배치하고 시 주석의 축전만 2면으로 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바. 대일본

-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본과 관계 개선 희망”(9/1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1년 전 재개한 관계 개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하여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다른 부문에서도 가까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는 평양 주재 교도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일본 이슈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송일호 “납치조사 보고서 거의 완성…일본과 협의 의사”(9/10, 연합뉴스)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10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9일 평양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결과 보고가 거의 완성됐다.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함.
- 송 대사는 북한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지 1년이 넘도록 결과를 일본에 알려주지 않은 것에 관해 “일본 측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는 뉴스는 전함.
- 그는 조사 결과를 보고할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는 상황을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하지는 않았고 일본에서도 이에 관해 공식 협의를 제안하지 않았으며 제안이 있으면 어떤 수준에서라도 응할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는 뉴스는 전함.
- 그는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를 짓기를 원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과거에) 조선인에게 불행과 고통을 줬다. (대북) 제재는 (북일 관계의) 장애물이며 완전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는 인용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日 안전보장 관련법안 성립을 전제로 한 자위대 부대 운영을 위한 내부자료 先 작성 관련 ‘국회 중창량원 통과 전에 새 운영과제를 내부 자료로 작성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단행한 행위이고 입법권의 침해’라며 ‘안전보장관련법안 철회와 군국화책동 중단’ 촉구(9.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 관련 ‘피해국 인민들에 대한 사죄는 물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사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은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 속에 정치·외교적인 고립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9.12,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9.7, 주한미군 주둔 70주년 관련)를 9월 11일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2015/689호’로 배포(9.13, 중앙방송·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쿠바 ‘2인자’ 접견…모란봉악단 축하공연(9/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가 7일 쿠바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 국가이사회 제1부위원장이며 내각 제1부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쿠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함.
 - 8일 면담에는 북측에서 김양건 당 비서가 유일하게 배석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하여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카넬 수석부외장 부부를 비롯한 쿠바 대표단과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도 관람했다고 뉴스는 전하고 모란봉악단은 쿠바인들의 감정을 표현한 노래 ‘관타나메라’와 ‘카프리섬’ 등을 불러 쿠바 대표단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고 뉴스는 전함.
 - 공연 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룡해·김양건 당 비서, 리수용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도 자리를 같이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김정은, 청년예술선전대 공연 칭찬...“만점짜리 공연”(9/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동지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연을 본 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오늘 공연은 내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연”이라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이라고 칭찬했다고 통신은 전함.
 -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양건 당 비서, 리일환 당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박봉주 총리, 나선 홍수피해지역 방문(9/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박봉주 총리가 라선시 큰물 피해지역을 현지에서 료해(파악)하였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총리는 북구 전투에 진입한 모든 단위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며 복구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고 전함.
- 북한 림광일, 2년만에 중장 계급장 달고 재등장(9/11,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가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권 수립 67주년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영상에 림광일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림광일은 옷깃에 별 두 개가 달린 군복을 입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뒷줄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박봉주 “남북 고위급 합의정신 귀중히 여겨야”(9/8, 조선중앙TV)
 -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는 8일 열린 정권수립 6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온 겨레가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박 총리는 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서 “북남관계에 대해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매체는 전함.
 - 남한을 우회적으로 겨냥해서는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인권문제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의 우월한 사회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절대로 허물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매체는 전함.
 - 8일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총리, 최룡해 당 비서 등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함.
- 북한, 김일성 항일빨치산동료 류경수 생일 100돌 기념(9/10,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인 류경수의 생일 10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10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은 10일 보고자로 나서 “류경수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슬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나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는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노동신문도 10일 “남들은 몇년이 걸려야 한다는 탱크병(탱크병) 양성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석 달 동안에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에 맞는 탱크의 산악전투조법을 완성해내고야 말았다”고 업적을 높이 평가함.
 - 방송은 10일 중앙보고회에 김기남 노동당 대남 담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류경수의 부인이자 빨치산 동료인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등을 거론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유엔 “북한, 이모작 수확량 지난해보다 21% 감소”(9/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북한 가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1% 줄었다고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수확량 감소는 곡창지대인 평안남도과 황해남북도에서 두드러져 이들 지역에서만 1만~2만t 가까이 줄었으며 밀과 보리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3만6천83t, 감자는 23만2천889으로 20% 감소했다고 방송은 인용하여 전함.
- 유엔 “북한 식량배급, 두달째 권장량 절반 못미쳐…가뭄 때문”(9/1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410g에서 250g으로 줄어든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12일 보도함.
 - 코슬렛 담당관은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함.

- 그는 이어 “지난달 북한 당국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면서 “농업 생산 체제 복구를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베트남과 경제·무역 확대 논의(9/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외경제성 대표단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표단의 회담이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북한 측에서는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베트남 측에서는 부후이 호앙 산업무역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함.
- 또 두 나라 사이 무역, 중공업 및 화학공업, 경공업, 에너지 분야의 투자와 경제협조에 관한 부문별 회담들이 있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국제적십자연맹, ‘홍수 피해’ 북한에 3억여원 추가 지원(9/10, 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지난달 말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나선시 수해 복구 특별지원금으로 27만달러(약 3억2천만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IFRC는 지난달 황해남도과 함경남북도에 이어 나선시에 내린 집중 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했다고 전하고 이어 홍수로 북한에서 8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으며 6천473가구 2만3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힌 내용을 방송은 전함.

■ 싱가포르 진포해운, 북한과 500억원 규모 불법거래(9/12, NK뉴스, 자유아시아방송)

- NK뉴스는 12일 싱가포르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진포해운이 허가 없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 또는 기관들과 총 605차례, 4천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고 보도함.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0년 11월 “북한이 유엔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동해선적대행’과 ‘진포해운회사’를 설립해 불법 무기류, 마약, 담배 등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北, 전자상업체계 [상연] 을 개발하여 봉사활동에 도입(9.8, 중앙통신)
- 내각사무국 등 성·중앙기관 일꾼-정무원들이 마련한 각종 건설자재·생활필수품을 실은 열차, 9월 8일 선봉역 도착 등 '전국 각지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 지원사업' 전개(9.10,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유엔 “북한, 홍수 피해로 설사병 심각”(9/9,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가뭄에 이은 홍수 피해로 북한에 설사병이심각한 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9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현재 황해남도에서는 2014년보다 200% 증가한 48만 명, 황해북도에서는 25만 명이 설사병을 앓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은의 ‘물고기 사랑’…북한서 물고기 요리 경연대회(9/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황금해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조선에서 전국물고기요리경

- 연이 평양시와 서부지구, 동부지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경연대회는 각각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성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열렸으며 통신은 “인민들의 식탁 위에 바다향기가 넘치게 하려는 사회급양봉사부문 일군들과 요리사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고 대회 분위기를 전하고 우수 단체들과 요리사들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콜린 파월, 북한·이란에 “핵무기 사용은 자살 행위”(9/7, 연합뉴스)
 - 파월 전 국무장관은 6일 오전 N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이란 핵합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파월 전 장관은 사회자가 ‘이란 핵합의가 왜 이미 실패한 북한과의 합의와 다르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1994년 최초 합의(제네바 합의)에서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서는 북한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소개함.
 - 또한, “이란과 협상을 한다면 나는 북한에게 했듯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의 수도와 사회가 그 다음 날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힘.
- 38노스, 영변 핵시설 활동 활발해져…플루토늄 생산 의심(9/9, 연합뉴스)
 -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활발한 활동이 포착돼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밝힘. 이 사이트는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영변 핵단지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포함한 두 곳에서 차량 이동 등 높은 수준의 활동이 새롭게 포착됐다고 설명함.
 - 38노스는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핵시설 개보수 또는 오염 장비 교체 등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폐연료봉들을 원자로에서 꺼내려는 준비 작업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또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움직임이 맞다면 이는 북한 핵무기 비축량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이 사이트는 덧붙임.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임.

■ NHK, 北 미사일 발사 대비 한미일 당국자 회담 조율(9/10,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계기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에 대비해 한국·미국·일본이 당국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NHK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당국자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 회의에는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은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등 3국의 대북 정책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을 의제로 다룬 것으로 보임. 한편, 한미일 3국은 올해 5월 서울에서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북한, 올해 고폭실험 안했다…핵탄두 소형화기술 확보했다(9/10, 연합뉴스)

- 국방부는 10일 북한이 올해 들어서는 고폭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고폭 실험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겪는 과정으로, 북한이 그간 활발하게 진행하던 고폭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당국은 면밀히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올해 고폭실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금년에는 없었다.”고 답변함.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고폭실험장의 폭발구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러한 폭발구 변화와 함께 고폭실험이 중지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자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감 질의답변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국·중국·북한에 핵실험금지 동참 촉구 (9/11,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 중국 등에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을 촉구했다고 유엔본부가 밝힘.

- 반 총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8월 29일)’을 기념해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자”며 이같이 말함. 또한, 현재 CTBT에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해 이집트, 인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모두 8개국으로 반 총장은 이들 국가가 조속히 비준 절차를 마쳐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반 총장의 촉구에 미국과 중국이 동참 의사를 밝힘. 로즈 고테펠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CTBT는 미국의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도 좋은 일”이라며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이 조약의 확고한 지지자”라며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북한, “고위급 합의, 남북 평화수호능력 보여줘…미군 철수해야”(9/7,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 주둔의 해묵은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으며, 미군 병력이 남한에 주둔하고 미국이 남한의 군 통수권을 가지는 한 남북관계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한편, 그는 지난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국제공동체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해 강력히 요구했다.”며 “미국은 남조선 강점이 시대착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은 미국(9/7, 연합뉴스)
 - 북한은 오는 8일 주한미군 주둔 70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말살되고 있는 인권 범죄국들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 행위에 관한 ‘인권보호 증진노력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은 인권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선택적인 나라에 정치적 압력과 내정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 유린국으로 처벌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함.

■ 북한, 주한미군 주둔 70년 맞아 미군 철수 촉구(9/8,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주한미군 주둔 70년을 맞아 주한미군이 ‘민족 불행의 장본인’이라며 이날 ‘미국은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신문은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조선반도가 핵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짙게 떠도는 열점 지역으로 된 것은 바로 남조선 강점 미군과 남조선 강점 정책,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거론하며 “우리민족 끼리의 이념 밑에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있다.”며 “남조선 강점 미군이 우리의 남침을 막는 억제력이라는 간판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함. 신문은 “우리의 핵보유는 미제가 남조선을 핵 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하는 데 대응한 매우 정당한 조치”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튀면 미국도 핵 재앙 속에 빠져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미 전문가, “중국, 북한정권 변형 시도…북한은 두려워해”(9/8, 연합뉴스)

- 8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케이트연구소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한 동아시아문제 전문가로부터 중국이 북한의 정치·경제 제도 전반을 변형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힘.
- 밴도우 연구원에 따르면, 이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으로 핵문제를 지목했는데, 중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를 당사자가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중국 전문가는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 북한 3자가 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음. 이어 이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두 번째로 우려하는 사안이 북한의 경제개발 문제라며 양자 간 교역과 탈북자 문제, 북핵 6자회담 등을 그 다음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미 하원 외교위원장, 대북방송이 북한 태도 바꾸는 최선책(9/9,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대북 방송과 DVD,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유입이 북한의 태도를 바꿔놓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밝힘.
 - 이는 지난 달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과정에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주목을 받은 가운데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북 방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됨.
 -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방송을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격이 저렴한 단파라디오 방송과 소셜미디어, DVD를 통해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해 로이스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 등에 대북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 정보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북한 핵협상, 근본적으로 반대(9/10, 연합뉴스)
 - 美 공화당 내 지지율 1위인 도널드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북한 핵협상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I would be essentially be against the deal)”이라고 말함.
 -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어떤 협상에도 반대하며,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됨. 이는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공화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 트럼프는 북한은 물론 이란 핵협상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끔찍한 것이며, 이스라엘에는 파국적인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날 집회 연설에서도 이란 핵합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다. 중·북 관계

■ 中 전문가, 시진핑,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 실행(9/7, 연합뉴스)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핵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중국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됨.
-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7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안보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에서 일방적인 징벌 조치들(unilateral punitive measures)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그는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한 공공 담론을 허용한 점도 과거와는 다른 차이점으로 지목했는데, 이를 계기로 북한을 반대하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임. 청 교수는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반대했지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개입을 받아들여지게 됐으며 시진핑 시대에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변천해왔다고 지적함.

■ 주북 중국대사, 최룡해 파견은 김정은의 북중우호 중시한 조치(9/7, 연합뉴스)

-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항전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두고 ‘북중 우호관계를 중시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음.
- 7일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는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항전승리 기념활동 리셉션 연설에서 최 비서가 대표단을 이끌고 기념활동에 참석한 것은 “항전 역사를 새기고 평화·정의를 수호하려는 김정은 제1비서와 당, 정부의 굳은 신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룡해 비서는 모두 중국이 초대 한 손님들로 모두 중국의 뜨겁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며 “중국은 조선(북한), 한국과 함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 당국자들의 이런 반응은 최 비서의 열병식 참석 하나를 두고 북중 관계 전말을 넘겨 짓지 말라는 뜻이 내포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다독이기’ 목적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됨.

- 中 언론, 북중 관계 미묘하나 통제 가능(9/8,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사설을 통해 “현재의 북중 관계는 비교적 미묘하지만 양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양국이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양국의 인식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함.
 - 신문은 양국관계를 미묘하다고 진단한 이유에 대해 아직 새로운 지도자(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만남이 없었음에도 양국 우호관계의 기본 틀과 리듬이 유지되고 양국이 상대방을 향해 적극적인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음. 이어 “양국은 갈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 갈등이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며 양국관계의 기초는 매우 강하며 핵 문제가 오늘날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중국은 최근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와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중국의 북한 중시 메시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이 사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김정은에 정권수립 축전…북한, 시진핑 축전 ‘홀대’(9/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정권수립 67주년을 하루 앞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축전은 신문 1면에 배치하고 시 주석의 축전만 2면으로 빼는 ‘미묘한 반응’을 보임. 이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임.
- 中 단둥서 국제관광박람회 개막…북중 국경관광 홍보(9/10, 연합뉴스)
 - ‘제12회 동아시아 국제관광박람회 및 압록강국제관광축제’가 10일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댄 압록강 하구의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개막함. 단둥시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동아시아 관광박람회는 '생태 단둥, 즐거운 여행 랴오닝성'을 주제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20개국의 관광기구 대표와 상공인 등 3만 명이 참가함.
 - 단둥시와 조직위는 박람회를 통해 동아시아 관광업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북·중 국경관광을 널리 홍보할 방침임.

- 박람회 기간에 북한 신의주~단둥 간 압록강변 수영대회를 비롯해 대북 관광시장 홍보회, 북한 문화공연 등이 열리며, 랴오닝 관광상품 창의설계작품전, 온·오프라인 관광산업 발전포럼, 박람회 참가국 및 지역관광 설명회 등이 마련됨.

■ 북한 무역창구 연결 中 고속철 3개 완전개통 눈앞(9/10,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무역창구와 연결되는 중국 고속철도 3개 노선이 최근 개통했거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북한과 중국 간 경제거리를 크게 단축할 것으로 전망됨.
- 10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나선시 원정리 통상구와 연결되는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에 내달부터 고속철이 정식 개통해 동북지방 중심 지역까지 소요시간을 12~14시간에서 5시간으로 크게 단축할 예정임. ‘창훈(長琿: 창춘~훈춘) 고속철도’로 명명된 이 철도는 공사비 416억 위안(약 7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철도사업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50여km 떨어진 훈춘의 대외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는 이달 초 동북지방 중심도시 선양(瀋陽)으로 연결되는 고속철이 개통돼 본격 운행되고 있음. 단둥은 철도와 도로 등 육상교통을 통해 신의주로 반입되는 화물량이 북·중 교역 총량의 80%에 이르는 양국 간 최대 교역거점임.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처럼 북한과 연결되는 접경 도시들의 고속철도 개통 효과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외국의 北 지하자원 개발투자 대부분은 중국 기업(9/10, 연합뉴스)

- 외국의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 투자사업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를 인용, “외국 기업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투자 사업은 총 36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통일부는 “계약체결 외국기업 상대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 투자가 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함.
- 북한이 중국 등 외국기업과 체결한 지하자원은 금, 은, 동, 아연, 철,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갈탄 등으로 전해졌으며, 중국 등 외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투자 방식은 대체로 시설, 장비 등을 현물로 투자하고 광산물로 상환 받는

구상무역방식 또는 광산 운영과 채굴권을 북측이 보유하는 합작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밝혀짐.

■ 중국 랴오닝성, 러시아 물류지구 건설한다…일대일로 일환(9/12, 연합뉴스)

-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부응해 유라시아 육상통로 구축을 추진하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가 러시아 철도회사와 협력해 양국에 물류지구를 건설함.
- 12일 중국증권신문 인터넷판(中國證券網)에 따르면 잉커우 시와 러시아철도 주식회사는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잉커우 항구에 중국-러시아 물류지구를, 모스크바에 러시아-중국 물류센터를 짓기로 함.
- 랴오닝 성과 잉커우 시는 이번 각서 체결을 통해 러시아를 경유해 유럽에 도착하는 육·해 복합운송 루트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잉커우 항구에서 철도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만저우리(滿洲里),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착하는 수출입 등 각종 화물량을 늘리기로 함. 리허중(李和忠) 잉커우항 집단공사 동사장(회장)은 “이번 각서 체결로 중·러 간 국제물류 통로가 확대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지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등 양국의 국가전략 추진에 속도가 더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北 신의주-中 단둥 연결 신압록강대교 내년 개통(9/11, 연합뉴스)

-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꼽혀온 신압록강대교가 내년 중에 개통될 것으로 알려짐.
- 동아시아 외교 전문가인 이창주 중국 푸단(復旦)대 박사는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최근 접촉한 단둥시정부 간부로부터 ‘신압록강대교가 내년에 개통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힘. 이 박사는 특히 중국이 이미 북측 도로 건설에 투자키로 했다는 단둥시 간부의 말도 들었다며 중톈주위(中鐵九局) 직원들이 토지측량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함.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에 위치한 중톈주위 집단유한회사는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 국유기업으로 도로, 철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로 담당함. 이와 관련 중국은 신압록강대교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한 ‘유라시아 육로 통로 및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의 인프라로 보고 건설비 22억2천만 위안(약 4천115억 원)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짐.

라. 일·북 관계

■ 북한, 일본경찰 조선총련 압수수색 연이틀 맹비난(9/9, 연합뉴스)

- 북한은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홋카이도(北海道)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연이틀 강력하게 반발함. 북한의 조일우호친선협회와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는 9일 각각 대변인 담화를 통해 “파쑸적 탄압,” “횡포 무도한 폭거”라며 일본 당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압수수색이 “위법단체, 범죄단체의 모자를 씌워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서 말살해버리자는 데 악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일본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가 질식되고 민족배타주의가 활개 치는 세계최악의 범죄국가, 가장 악랄한 전범국이라는 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고 비난함. 한편, 조선해외 동포원호위원회도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탄압 책동”으로 규정함.

■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본과 관계 개선 희망(9/1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1년 전 재개한 관계 개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김 상임위원장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다른 부문에서도 가까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양 주재 교도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일본 이슈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일본과 북한이 지난해 3월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임.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일본인들의 소재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부족한 점이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줄곧 지적하고 있음.

■ 北송일호, “납치조사 보고서 거의 완성…일본과 협의 의사”(9/10,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주장함.

- 그는 10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결과 보고가 거의 완성됐다.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함. 또한, 송 대사는 북한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지 1년이 넘도록 결과를 일본에 알려주지 않은 것에 관해 “일본 측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함.
- 그는 “일본 측의 누구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응하는 일본 측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서로 조율할 조직을 일본이 만들기 바란다는 뜻을 피력하며,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를 짓기를 원한다고 강조함.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주한 美 8군사령관, 北 도발 때 한미동맹 강인함 확인(9/9, 연합뉴스)
 - 버나드 샴포우 주한 미 8군사령관은 지난달 북한의 지뢰·포격도발 사태 속에서 한미동맹의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 샴포우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지난달 4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과 20일 포격 도발 당시 매일 임무에 헌신하는 한미동맹의 강인함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며, “한미동맹은 이번 사태 때 북한군의 추가 도발 위협에 맞서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당장 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의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함.

- 삼포우 사령관은 “함께 근무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눈빛에서 긴장감과 함께 강인함을 느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희망과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군 장교들은 한미동맹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함. 그는 “과거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계기로 결코 깨질 수 없는 유대를 공고히 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역설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9/10,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서) 현재로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함.
 -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것이 끝나야 (양국간 논의가 이뤄질 것)”라고 설명함.
- 미국 국무부, “한국 정부·국민의 강한 지지에 깊은 감사”(9/12,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사건발생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밝힘.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측이 보여준 지지는 양국 국민들 사이의 깊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조사과정을 통틀어 한국의 사법당국과 충실히 협력했다.”면서 “우리는 범행의 동기나 판결 이유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힘.

나. 한·중 관계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박 대통령 방중, 사드배치 中 설득에 도움(9/10, 연합뉴스)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9일(이하 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한 전 장관은 “만일 한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중국 지도부에게 ‘사드 배치가 중국에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방중 결정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 한 전 장관은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의 입장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 대립적인 접근을 피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헤징(hedging·중립을 지키며 실익을 추구한다는 의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입장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미국에 협조하는 일본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피하고 통일을 추구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중의 이 같은 우호적 관계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함.

■ 中주도 AIIB, 내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작(9/9, 연합뉴스)

-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이르면 내년부터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해 양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찾은 진리췌(金立群) AIIB 초대 총재 지명자는 9일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AIIB는) 오래 기다릴 생각이 없다. 월드뱅크나 유럽부흥개발(EBRD) 같은 기존 기구보다는 훨씬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말함. “투자 포트폴리오를 빨리 키우려고 한다. 2016년부터 최고의 질을 보장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함.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공통점이 많다. AIIB는 두 가지 구상이 함께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함.
- AIIB의 투자 사업은 건설·토목 인프라, 통신·IT, 전력, 상하수도 등으로 다양하고, 2020년까지 매년 7천300억 달러 수준인 아시아지역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서 “한반도통일 적극 협조해야” 공개 목소리(9/11, 연합뉴스)

- 한중 우호관계가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옴.

-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을 지낸 덩이원(鄧聿文) 씨는 11일 ‘중국의 친한원조(親韓遠朝·한국과 가까워지고 북한과 멀어짐)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칼럼을 게재함.
- 이 칼럼에서 덩 전 부편집장은 “북한문제에서 한중 협력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불편해하는 입장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한편에 서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도 새로운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이며 “북중 관계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이 더는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적극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함.

다. 한·일 관계

- 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9/8, 연합뉴스)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흥현(69)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함.
 - 최고재판소는 “재외 피폭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재외 피폭자에게)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오사카부의 상고를 판사 5명 전원일치로 기각함.
 -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로,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이번 판결에 입각, 4천 200여명으로 추정되는 재외 피폭자들을 피폭자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전액 지급 대상으로 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日후쿠오카서 조선인추모비의 ‘강제연행’ 문구 수정요구(9/9, 연합뉴스)**
 - 일본 후쿠오카에 설치된 징용 조선인 추모비의 담긴 ‘강제연행’ 문구를 일부 주민이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짐.
 - 9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 이즈카(飯塚)시 소재 시립 ‘이즈카영원(靈園, 공동묘지)’에 있는 조선인 추모비의 문구를 수정하라고 일부 주민이 사이토 모리치카(齊藤守史) 시장과 고이카와 신지(鯉川信二) 시의회 의장에게 8일 진정서를 제출함.
 - 이들은 추모비에 “일본 식민지 정책에 의해 수많은 조선인과 외국인이 일본 각지에 강제 연행됐다,” “지쿠호(筑豊)에서는 15만 명이나 되는 조선인이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일본어와 한글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진정서에는 강제연행이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산케이는 전함.
- **日세계유산담당자, 징용시설 역사서술, 한국 말대로 하지말고...(9/11, 연합뉴스)**
 - 조선인이 징용된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 일본 정부 관료는 한국의 주장을 따르지 말고 독자적 시각에서 관련 역사 정보를 제공하자고 주장함.
 -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고코(加藤康子) 일본 내각관방참여는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자국 산업시설의 역사를 설명하는 정보센터에 관해 “제대로 역사를 마주 보고 한국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일본으로서 확립한 계획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함.
 - 그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시민단체 등이 일부 산업 시설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동원돼 노역한 것이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과 동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역사를 뒤트는 날조다. 일본의 이미지를 손상하려는 선전에 대항수단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함. 한편,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노역 사실 등 관련 역사 전체를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조선인 징용은 사실이지만 이를 강제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엔총회 때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정상회담 조율할 듯(9/11, 연합뉴스)**
 -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양국 정부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맞춰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인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교장관 회담은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임. 앞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日 강제동원 기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후보 신청(9/13, 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임. 이는 일본이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이 징용된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데 대한 정면 대응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됨.
- 이들 기록물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04년 이후 11년간 생산·수집한 강제동원 관련 기록을 총망라한 것으로, 기록물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이고 일제의 식민지와 점령지 전반에 관한 내용까지 다룸. 이를 고려하면 강제동원 피해 기록은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으로 꼽는 ▲진정성 ▲독창성·비대체성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진 중요성 등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옴.
- 한국 정부는 일본이 최근 군함도 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든 일종의 ‘대항 등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민간에서도 조만간 종교계와 학계, 강제동원 피해 유가족 등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운동본부’를 꾸려 학술·정책토론회와 홍보활동, 국내외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中 관영언론, 연일 대미압박…“더 큰 책임감 가져야”(9/8,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이달 말 이뤄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연일 미국을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8일 1면에 게재한 ‘왕하이러우(望海樓)’란 이름의 고정칼럼에서 ‘대중 관계에서 미국이 반드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최근 미국의 일부 이익집단과 반중(反中)세력들이 난동을 부려 남중국해 위기, 중국의 대미 인터넷 기밀절취, 중국 비즈니스 환경 악화 등을 꾸며대 중간에서 각종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인민일보는 “미국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이 이미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협력적 미중 관계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함. 앞서 인민일보는 전날에도 ‘중성’이란 칼럼에서 미중간 신형 대국관계의 실질적인 구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바 있음.
- 시진핑, 22일 미국 국민방문…28일 유엔 연설(9/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2일 미국을 국민 방문하여 28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짐.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22일 시애틀에서 일련의 공식 업무를 보는 것으로 국민방문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중국 정부 당국은 시 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기업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기업 임원과 리셉션을 갖는 등 경제계와 교류할 예정으로 보임.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내 중국의 활동에서 사이버 스파이까지 양국 관계를 켜고럽게 만든 문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됨.
- 美·中 대표언론, 시리아 난민사태 둘러싸고 ‘네 탓’ 공방(9/10, 연합뉴스)
 -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체제전복’ 의도에 기인한 것이고 주장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맞섬.

- 지난 7일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1면에서 텐원린(田文林)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연구원은 최근 내전 중인 시리아와 리비아 등에서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사태를 두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값을 받는 격”이라고 비판함. 그는 “현재 비극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유럽이 (아랍권 민주화 시위를 틈타) ‘정권교체’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러한 패권주의적 외교정책은 무섭고 어리석으며 유럽 난민 사태와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대를 불러왔다.”고 적음.
- 이런 공격에 대해 NYT는 9일(현지시간) ‘중국에 난민 위기는 남의 잘못이자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7차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의 때 난민 문제를 의제로 삼자는 EU 측 제안을 중국이 반대한 일화를 소개함. 또,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자료를 인용,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최대 외화 보유액을 자랑하는 중국이 정작 시리아 민간인 지원에 낸 기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은 140억 달러 가운데 0.1%인 1천4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함.

■ 美학자, “미국,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락안해야”(9/10,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제안을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학자의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의 소리(VOA)에서 미국 해군 군사학교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앤드루 에릭슨 박사는 시 주석이 이달 하순 워싱턴DC 방문 기간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거듭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함.
- 에릭슨 박사는 미국이 중국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국제 사회에 미국의 쇠퇴 조짐으로 내비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중대 양보로 간주하면서 미국에 대한 요구를 확대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그는 또 작년 이후의 국제 질서는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1914년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국과 빠르게 부상한 신흥국이 필연적으로 무력 충돌하게 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Tuchididdes Trap)’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함.

■ 시진핑 외교책사,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 개입말라(9/11,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책사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들어간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미국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고 말함.

- 11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양 국무위원은 시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주제로 한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약속한 대로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같이 밝힘. 또한, 그는 두 지도자가 이번 만남에서 “모든 주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루게 될 것이라고 “중미 관계, 특히 신형대국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을 포함한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위대한 합의(great deal)’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그의 이런 발언들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서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 신형대국관계 구축, 사이버 해킹 문제 등 장기간 이어진 첨예한 이슈들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됨.

■ 시진핑, 방미 앞두고 ‘사이버공격’ 미국-중국 최대 현안 부상(9/13,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사이버공격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함. 미국 당국자들이 잇따라 중국 사이버공격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이버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함.
-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포트 미드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중국발 사이버공격이 이뤄지고 있음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함. 또한, “이 사안을 핵심적인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그렇게 다뤄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행위자들은 사이버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도 사이버공격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함. 또한 그는 “사이버위기는 중국과 미국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협력을 도모해야 할 지점이어야 한다.”며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미중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中, 인공섬 매립 멈추지 않았다...미·중 '남중국해' 대립 심화(9/13, 연합뉴스)
 - 오는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 되고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를 중단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건설 활동을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펜타곤과 의회 내에서는 대중 비판론이 고조되면서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항공기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8일 남중국해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중국이 수비 환초(중국어명 주비자오·渚碧礁)와 미스치프 환초(중국어명 메이저자오·美濟礁)에 활주로 또는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에 새롭게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밝힘. 또한, 중국은 이미 비행장 공사가 완료된 수비 환초 내에 길이 1.4 마일, 넓이 200 피트의 평탄한 부지를 만든 뒤 앞으로 이를 더 확장하고 아스팔트를 덮어 활주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함.

바. 미·일 관계

- 미군기지 이전, 日중앙정부-오키나와 협상 결렬(9/8, 연합뉴스)
 - 오키나와(沖縄)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이전을 둘러싼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의 협상이 결렬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 등이 7일 총리 관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미군기지 문제 관련 '집중 협의'의 최종 회합으로 설정한 이날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일본 중앙 정부는 일시 중단해온 후텐마 기지의 현 내 이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그에 반해 오키나와현은 전임 지사 재임 시절 이뤄진 이전 대상지 매립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 한편, 미일 양국 정부는 주택가 주변에 있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후텐마 기지(오키나와현 기노완시)를 현내 헤노코(邊野古) 연안(나고시 소재)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합의 이행을 못 하고 있음.

- 미·일, 오키나와에 中잠수함 감시 시스템 운용(9/9,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키나와(沖縄)가 있는 난세이(南西) 제도의 태평양 측을 넓게 감시하는 최신형 잠수함 음향감시 시스템(SOSUS)을 설치했다고 보도함.
 -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협력해 운용중인 이 시스템은 동중국해와 서해(한국의 서해)로부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음.
 - 냉전시기 미국과 일본이 쓰가루(津軽), 쓰시마(對馬) 해협에서 구 소련 잠수함 감시를 위해 구형 잠수함 음향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밝혀진 바 있지만 중국 잠수함 감시를 위해 새 시스템을 설치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고 교도는 전함.

사. 미·러 관계

- 미국, 시리아 군사개입 의혹 러시아 견제 나서(9/8, 연합뉴스)
 -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시리아로 가는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러시아 군용 수송기들이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힘. 외무부는 수송기에 실린 화물의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는 화물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시리아로 가는 화물을 실은 2대의 러시아 수송기가 발칸반도와 그리스를 경유하는 노선 대신 이란 영공을 통해 시리아로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 신문 ‘카티메리니’는 보도했다.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은 러시아 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리스에 대한 미국의 이런 요청은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본격화하면서 군용 수송기를 통해 병력과 군수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임.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러시아가 군사 선발대를 시리아에 보냈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함.

■ 미국, 북극 정보역량 강화...러시아 등 견제(9/9,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 등을 겨냥해 북극권에 대한 정보 역량 강화 작업에 나섰다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8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행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 대부분은 최근 1년여 사이에 북극 정보
분석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이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최근 이들 전문가를 모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전략위원회를 창설했다.
- 이들 전문가는 북극 상공을 궤도 비행하는 정찰위성과 북극해 심해에 설치된
해군의 감시 센서 외에도 최근 설치된 캐나다의 청음시설과 노르웨이의 북극
감시선에서 수집된 기초 정보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음.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주요 관심은 북극권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러시아는 지난해 3월 북극해를 둘러싼 옛 소련 시절 군기지 10개를
재개장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폐쇄된 14개 비행장도 다시 문을 열.

■ 러시아, 핵탄두 탑재 수중 드론 개발 중(9/10,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기지 타격 등을 위해 핵탄두를 탑재한 수중
드론(UUV)을 개발 중이라고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국방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수중 드론 개발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핵전력 현대화계획의 하나라면서, 실전에 배치되면
메가톤(화약 100만t)급 폭발력을 지닌 핵탄두를 장착해 조지아주 킹스 베이와
워싱턴주의 푸젯 사운드에 있는 미 해군 핵잠수함 기지와 해안 도시 등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는 ‘카년(Kanyon)’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러시아의 이 계획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극비 사항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핵전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함. 또 다른 소식통도 러시아의 수중 드론은
수십 메가톤급의 위력을 지닌 자동잠항타격체(ASSV)로 설계되어 있으며,
군항과 해안도시 등 전략 가치가 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벌써부터 미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고민거리로 등장했다고 주장함.

■ 오바마, “러시아, 시리아서 큰 실수 말라” 경고(9/12, 연합뉴스)

-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9.11테러 14주년 행사가 열린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의 군 기지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의 무장을 돕는 전략은 큰 실수”라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결국 실패할 그런 전략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미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러시아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에 군사 고문과 군 장비를 지원한 데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 미국에서는 아사드 정권을 시리아 내전이 격화하도록 한 원흉으로 보고 잠재적인 축출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한데 반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오래 지원해왔고 그 수위를 최근 들어 높여가고 있는 실정임.

아. 중·일 관계

■ 중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비판 일본에 “침략역사 반성해야”(9/7, 연합뉴스)

- 중국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문제삼는 일본을 향해 연일 고강도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반 총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키로 한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 “우리는 개별국가(일본)에 대해 생트집을 잡지 말고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유엔 헌장을 더 공부하고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한편,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반 총장의 열병식 참관에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유엔은 중립적 조직이 아닌 공정·공평한 기구’란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평·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뭔가 말장난을 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비판 수위를 높임.

■ 다아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中열병식 참관 직접 비판…“극도로 유감”(9/1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 “극도로 유감”이라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쓸데없이 특정한 과거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말함.

- NHK에 의하면, 11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반 총장이 지난 3일 중국의 항일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융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가맹국들에 촉구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의 입장은 이미 반 총장을 비롯한 유엔 사무국의 상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유엔이 특정 입장이나 주장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함.

자. 중·러 관계

■ 중국, 러시아와 북극 개발 협력 강화 적극 추진(9/7, 연합뉴스)

- 중국이 북극의 항로와 에너지 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미국의 소리(VOA)는 6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쇄빙선 건조와 운영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 북부의 북극권 액화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다고 보도함.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통합조선공사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사장은 최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폐막한 ‘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쇄빙선 건조 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이에 대한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함. 러시아의 북극 문제 전문가인 수비야닌은 중국-러시아가 쇄빙선 건조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이 야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은 양국이 북극권에서의 합작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러시아, 중국 본토서 위안화 채권 발행 추진(9/8, 연합뉴스)

-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외국 정부로는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해 재정 충당을 계획하지만, 최근의 중국 금융 쇼크 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함.
- 블룸버그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병식 참석을 위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두 나라의 밀착을 과시하는 또 다른 상징으로 부각됐지만 시장 반응은 지극히 부정적이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책은행인 브네쉬에코노미뱅크가 최근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함. 란데스뱅크 베를린 인베스트먼트의 펀드 투자 책임자 루츠 뢰흐마이어는 블룸버그에 “지금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너무 늦었다.”고 말했으며, 모스크바의 우랄시브 캐피털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러시아의 위안화 채권 발행이 시장 측면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한 것”이라고 언급함.

차. 일·러 관계

- 아베, 유엔총회 때 푸틴과 정상회담 검토(9/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기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전달했으며, 머지않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힘.
 - 회담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이며, 쿠릴 4개 섬(북방영토)의 영유권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달 22일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擇捉>)을 방문한 것 때문에 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아베 총리는 ‘수뇌 간의 대화를 거듭하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다.’며 추진할 뜻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 처형(9/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공개 혹은 비공개로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죄수’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데, 누구나 다 짓는 범죄에 뜻밖에 걸려들었다는 의미에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임.
 - 지난 7월말까지 계속된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검열기간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재수 없이 들킨’ 양강도 혜산시의 주민 3명이 8월 20일 비공개로 처형됐다고 북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당중앙군사위원회 검열기간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한 죄로도 보위부에 구금되었던 사람 3명이 처형됐다”며 “인민반 회의에서 3명이 처형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했음.
 - 처형된 주민들은 모두 가정주부들로 한명은 혜산시 혜탄동에서 살았고 나머지 두 명은 혜산시 성후동에 있는 예술대학 주변에서 살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 이들은 한국과 정기적으로 전화연계를 가졌다는 죄로 처형됐다고 그는 언급했음.
 - 북한은 처형 전에 이들을 남편과 강제이혼 시켰고 대신 가족들은 그대로 혜산시에 살게끔 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음.
 -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올해 3월부터 국경연선에 러시아산 이동식 휴대전화 추적 장비들을 도입한데 이어 7월 중순부터는 독일제 휴대전화 추적설비들을 보강했다”고 말했음.
 - 특히 독일산 추적설비는 역대 최강이라 할 만큼 성능이 좋아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많은 주민들이 체포됐고 그들 중 일부는 처형됐다고 그는 설명했음.
 - 현지 주민들 속에서 독일산 추적설비는 ‘도살기’라고 불리는데, “그러나 이런 ‘도살기’를 어떤 경로로 보위부가 도입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에 처형된 여성들을 비롯해 최근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많은 주민들은 모두 독일제 휴대전화 추적설비에 걸려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 ‘꽃제비’를 범죄자들로 낙인(9/8,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봄 산불로 많은 손실을 입은 북한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요란한 선전을 펼치고 있음.

- 그런데 산불을 일으킨 책임을 모두 한국의 안기부(국가정보원)와 ‘꽃제비’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주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말했음.
 - 최근 연계가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5월 부령군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며 “산불의 책임을 물어 도 국토환경 관리국장과 산림보호구 소장 등 여러 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음.
 - 특히 국가명절인 5월 1일 국제로동자절을 맞아 ‘청진경기장’에서 체육경기대회가 한창이던 와중에 청진시 청암구역 관해동, 부령군 형제리와 김책시 일대에서 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체육경기대회가 도중에 중단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 당시 산불이 일어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은 함경북도 국토환경부문, 산림경영 부문의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 했다고 그는 이야기했음.
 - 산불은 봄철 농사준비에 나선 주민들이 폐기발을 일구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음.
 - 하지만 얼마 전부터 북한 당국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관련한 주민강연회를 조직하고 “올해 봄 함경북도에서 있었던 산불이 모두 안기부의 돈을 받은 ‘꽃제비’들의 소행이라고 선전해 주민들이 쓴 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이와 관련 7일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당 창건 기념일 전으로 무조건 ‘꽃제비’들을 없애라는 것이 중앙의 지시”라며 그러나 “애육원과 중등학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중등학교에서 탈출해 ‘꽃제비’로 떠돌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 온갖 통제에도 불구하고 ‘꽃제비’들이 계속 늘어나자 북한은 ‘꽃제비’들을 사회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 ‘꽃제비’들에 대한 주민들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그들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라고 그는 지적했음.
- 유엔 “북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9/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난 8일 발간한 전 세계 ‘2015 아동 사망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추정치는 1천 명당 25명임.
 - 이는 1990년 당시 1천 명당 43명, 2000년 당시 1천 명당 6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임.

- 현재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인 1천 명당 25명은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인 1천 명당 43명보다 크게 낮음.
- 북한의 1세 미만 영아 사망률도 2015년 1천 명당 20명으로 1990년 당시 1천 명당 33명에 비해 크게 줄었음.
- 또 1990년 당시 1천 명당 22명이었던 북한 신생아(Neonate) 사망률도 올해엔 1천 명당 14명으로 감소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 명당 3명이고 영아 사망률도 1천 명당 3명, 신생아 사망률은 1천 명당 2명임.
- 이는 북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 한편 2015년 중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 명당 11명, 미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 명당 7명임.

■ 북 여성들, 중앙여맹위원장에 불만(9/10, 자유아시아방송)

-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북한의 여맹, 즉 민주여성동맹이 가정주부들을 정치행사에 과도하게 동원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연락이 닿은 평양시의 박 씨 주민은 “요즘 여맹돌격대가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고, 거리에 나가 머리단장까지도 통제하고 있다”며 “당창건 70돌 행사와 관련해 진행되는 횃불행진과 쫓기대회 사회동원, 규찰대까지 너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민주여성동맹은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외곽단체로, 산하에는 30대~50대 여성 수백만 명을 거느리고 있음.
- 소식통은 “하도 여맹이 설치고 다녀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여맹, 연기 같은 여맹’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심지어 9총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는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군부대로, 7총국과 8총국이 있는데, 여성동맹이 공사판에 동원되자 9총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이렇게 되자, 평양시 여성들 속에서는 “감나무 중대장 출신 여맹위원장이 가정주부들을 군대처럼 다루고 있다”고 여맹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소식통은 “여맹위원장이 감나무중대장을 할 때 김정일의 집견을 받고 팔자가 완전 달라졌다”면서 “제대한 다음 체계적으로 밟아 지금은 위원장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 감나무중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대 중반 이 중대를 처음 시찰하고, 선군정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던 군부대로 알려지고 있음.
- 40대 후반으로 알려진 여맹위원장은 지난 2014년 2월 전임자였던 로성실 위원장이 장성택 관련 인물로 찍혀 낙마하면서 위원장에 올랐음.
-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자들을 군대처럼 혹사시키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음.
- 또 “여맹이 햇불행진, 가창대훈련(거리를 돌며 선동하는 활동), 충성자금 모으기 등에 닥치는 대로 과제를 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에 불만을 품으면 사상비판을 시키고, 3방송에 공개해 망신까지 주고 있다”고 전했다.

■ 프리덤 하우스 ‘북한, 정권 유지 위해 언론자유 강력 통제’(9/10, 미국의소리)

-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음.
- 지난 4월 말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언론자유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국가별 실태 북한 편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것임.
-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 정권이 모든 국내 언론매체를 통제하고, 모든 통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노동당 당원이고, 모든 매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 방송을 듣는 행위와 반체제 출판물을 소지한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돼 노동교화형이나 징역형, 심지어 사형선고까지 받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임.
- 또 북한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며,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실제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VD 기기 보유 가구가 늘면서 외국에서 밀반입된 DVD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가량은 텔레비전을 통해 외국 방송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를 통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이밖에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은 아직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당국자들에게 국한돼 있지만,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는 과학자나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하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돼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프리덤 하우스는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트라넷 접근이 도서관이나 직장의 컴퓨터를 통해 이뤄진다고 전했다.

2. 북한인권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통일·북한인권 논의 함께 해야”(9/9, 연합뉴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을 방문 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서 늘고 있는 통일 논의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더 시급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의 언급은 ‘8·25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통일외교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임.
 - 다루스만 보고관은 “통일은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묻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음.
 - 그는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의 반인권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반대로 책임 추궁 과정을 통해 통일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음.

- 그는 “결국 두 가지 모두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지금도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민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고, 이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진다”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與野, ‘북한인권법’ 쟁점 일부 합의…10년 만에 진전…북한인권재단 설립 법안 명시키로…
지도부 담판 통해 결정될지 주목(9/9, 데일리NK)

- 여야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될지 주목됨.
-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을 정리해 양당 대표에게 보고했음.
-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음.
- 여야는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을 넣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의견을 모았음.
-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음.
-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는 물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권증진 사업, 정책 대안 개발과 함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됨.
-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재단이 설립될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간사 간 논의에서는 이를 빼기로 합의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10년 만에 제정될지 관심이 모아짐.

- 하지만 여야는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지도부 간 최종 담판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옴.

■ 미 국무부, 북한인권법 폐기 북한 요구 일축(9/10, 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에서 제시된 3백 43개 권고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음.
- 북한은 지난 5월 실시된 미국에 대한 UPR 심사에서, 북한인권법이 미국 정부의 사법관할권을 벗어난 법률이라며 무조건 폐기하라고 요구했음.
- 북한은 그같은 법률들이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미 국무부는 검토 결과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

■ 북한, 유엔 북한인권토론회 비난…“정치적 도발 책동”(9/10, 연합뉴스)

- 북한은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린 정치적 도발 책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30차 회의 기간 적대 세력들은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공화국을 비난하는 놀음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에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다”며 “미국은 이란 핵 문제 타결 후 우리의 인권문제에 집중하며 인권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유엔 무대를 악용해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 일본도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조일 쌍방 간에 합의된 문제를 하늘로 날려보낼 작도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아냥댔음.
-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주제별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제라는 것들을 보면 이미 허위성이 드러난 날조 모략 자료들”이라며 “탈북자와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의 허위진술을 현지확인도 없이 주어 모은 것”이라고 깎아내렸음.

- 오히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 등 서방의 이주민 배척이나 종교 탄압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이어 “우리나라에는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적 제도가 수립돼 있다”고 항변했음.

■ 차대통령 “한반도 통일, 북핵·인권 문제 근본적 해결책” 2015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 “통일, 지구상의 큰 숙제”(9/10, 데일리NK)

-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은 북핵과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9일 박 대통령은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SDD)’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땅 한반도는 아직도 지구상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현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박 대통령은 테러를 비롯한 전 세계적 안보위협과 역사 갈등 등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계속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그는 “불과 한 달 전에도 북한의 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일관된 원칙을 갖고 대응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가 다시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북한도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에서 벗어나 개방과 개혁을 통해 진정한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 군비통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정상적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아울러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동북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국가 간 불신과 긴장을 신뢰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엔 북 인권 토론 패널리스트 확정(9/10,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공보담당은 오는 14일 개막되는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 개최될 사상 첫 북한인권 관련 패널 토론회 즉 전문가 토론회의 참석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부대 행사가 아닌 공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21일 납치와 강제실종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 지난 3월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resolution 28/22)이 이번 회기에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17명의 일본인 납북자 중 한 명인 다구치 야에코 씨의 아들 이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발제할 예정임.
- 다구치 야에코 씨는 특히 1982년 북한 당국이 자행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가 공작원으로 파견되기 전 북한에서 일본어와 역사지리 등을 가르친 인물로 알려졌다.
-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북한은 외국인을 납치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테러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이외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책 ‘숨겨진 수용소’의 저자인 미국의 인권운동가 데이빗 호크 씨와 한국의 인권운동가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권은경 사무국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임.

■ “유엔, 北주민 의견 반영해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야” 윤여상 北인권기록보존소장 “북한인권 개선과 가해자 처벌에 北주민 의견 반영돼야”(9/11, 데일리NK)

-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활동에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음.
-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9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건 유엔의 권한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호소와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윤 소장은 “북한인권 개선 방법과 감정은 처벌 방식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 유린의 현실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인권 개선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통일 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윤 소장은 “통일 이후 인권 문제로 북북 갈등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권을 유린당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한 간부들에게 얼마나 큰 울분과 분노를 갖고 있을지 헤아려 이제 통일 이후 처참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탈북자

■ 8월 탈북 난민 미 입국 '0'(9/8,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8월 한 달 동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난민 입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한 달 총 5천 821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지만 북한 출신 난민은 한 명도 없었음.
- 이로써 지난해 10월 2015 회계연도가 시작한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8월말 기준 모두 15명으로 한 달 전과 변함없음.
- 또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후 2006년 이래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받고 입국한 탈북자 수도 총 186명으로 변하지 않았음.
- 한편 지난 8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5천821명 중 미얀마 출신이 1천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탄(921명)과 이라크(837명)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824명) 출신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음.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상봉 내달 20일~26일 실시(9/8, 자유아시아방송)

- 남북이 8일 마라톤협상 끝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음.
- 판문점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서울 시간으로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에 시작돼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 10분까지 24시간 가까이 진행됐음.
- 남북은 또 9월 15일까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10월 5일 생사확인 회보서를, 그리고 10월 8일 최종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남측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으로 합의했음.

- 남북 양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놓고 의견 대립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음.
- 남측은 상봉행사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며 10월 초에 하자고 요구한 반면, 북측은 노동당 창건 행사 준비를 이유로 10월 중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남측은 북측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을 전후해 장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을 우려해 10월 초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이덕행 실행위원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 결국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음.
- 이에 따라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 명단교환 등 남측이 제안한 사안들은 차기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임.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이덕행 수석대표 “생사확인 의뢰대상 중 50명은 국군포로”(9/8, 연합뉴스)
 -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은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은 8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이산가족 명단이 200명이라면 국군포로 이산가족 명단 50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실행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사확인 의뢰대상자가 남측은 250명이고 북측은 200명인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국군포로 이산상봉을 신청한) 이들은 북측 가족이 확인되면 100% 상봉단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 정부는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국군포로 생사확인을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 실행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발언에 대한 북측의 불만 제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7. 대북지원

- 카리타스, 북에 내시경 기증교육(9/8,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민간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지부는 지난 8월 북한에 의료장비를 전달하고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연수도 가졌다고 밝혔다.
 - 카리타스는 최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평양 간염병원과 함흥종합병원에 내시경 장비 두 세트를 기증했다며 활동소식을 전했다.
 - 이번 의료장비 지원은 지난 해 말 에볼라 감염방지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북한 입국금지 조치가 올해 초 해제된 이후 두 번째 실시됐음.
 - 지난 1월에는 내시경을 비롯한 각종 의료장비가 평양에 도착했지만 막상 카리타스 관계자들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북한 내 병원으로의 분배가 이뤄지지 못했음.
 - 하지만 에볼라로 인한 금지조치가 다섯달 만에 해제된 직후 1차 의료기구가 보내졌고 지난 달 2차로 내시경 등이 전달된 것임.
 - 의료장비 사용법 강의를 맡았던 독일의 마르쿠스 운네베르 전문의는 “카리타스측이 전달한 내시경 등 의료기구는 대부분 만성 간염환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카리타스 측은 이밖에도 북한에서 문천 결핵요양원과 원산의 결핵병원 및 어린이병원 인근에 온실을 짓고 각종 채소와 버섯을 재배해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적십자, 북 홍수 피해 지원금 두 배로(9/9,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초 황해남도 등에 내린 홍수로 피해를 입은 900여 가구에 이어 지난달 중순 라선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1천 30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재난구호긴급기금(Disaster Relief Emergency Fund:DREF) 액수를 늘렸음.
 - 국제적십자사 베이징지부의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할당된 재난구호긴급기금 20여 만 달러를 47만여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 구호품 분배와 위생 증진, 특히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수질정화 작업에 투입될 인력 동원과 재난에 대비해 비축할 식품 이외의 구호물품을 추가 구비하는데 필요한 액수임.
 - 국제적십자사가 8일 발표한 최신 홍수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북한 1년 강수량의 절반이 넘는 32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89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총 2만 2천 600여 명이 수해를 당했음.
 - 또 1천 400여 가구가 집을 잃었고 4천 800여 가구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적십자회 등의 피해 상황 보고를 인용해 특히 두 번째 홍수로 인해 인구 20여 만 명의 라선 특별경제구역이 48시간 가량 무릎까지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전했다.
 - 전력망이 무너져 3일간 정전사태가 발생했는데,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던 다리가 적어도 두 개 이상 파손되면서 라선에 대한 공급체계 악화와 심각한 교통 지연을 가져왔다는 지적임.
 - 조선적십자회는 라선에서 6개 병원, 11개 학교와 15개 유치원 등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음.
 - 특히 라선시의 선봉구역에서는 수도시설이 파손되면서 주민들이 홍수로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인성 질병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수해지역 주민 대부분이 공공건물이나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어 음식,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설명임.
 - 따라서 라선에 수질정화제를 보급하는 한편 적어도 한 달 간 수질정화팀을 파견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국제적십자사는 강조했다.
- UN “북 홍수 특별 지원금 배당 없어”(9/10,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유엔 기구들과 국제비정부기구들이 라선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주말 평양에 돌아왔다”면서 “실사 결과, 이번 홍수로 1만 1천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평양에 있는 실사단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바를 전하면서 “유엔의 실제 조사를 근거로 북한에 미리 비축해둔 인도주의 긴급

- 지원품들을 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엔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품은 의료기구들, 고단백질 비스킷 (과자), 물탱크 그리고 유아용 긴급 구호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현재로서는) 이번 홍수로 따로 ‘특별 긴급 지원 기금’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이 기구는 이어 올해 유엔의 대북 사업을 위해 총 1억 1천 700만 달러가 책정됐지만 지금 이 중 36% 만이 걷힌 상태라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음.

8. 북한동향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9월 7일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 폭로 「조사통보」 발표 및 ‘주한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 전개’ 선동(9.7, 중앙통신)
 -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극악한 말살범죄, △전대미문의 대집단학살범죄,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의 반인륜적 범죄
 - * 韓·美의 ‘종속적 동맹관계와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사고방식이 미군의 반인륜적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투쟁’ 선동(9.7, 평양방송/미군이 활개치는 치외법권지대)
- **【조선인권연구협회】**, 9월 7일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보고서(6개장 구성)」 발표를 통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국 인권교살국’이라고 폭로(9.7, 중앙통신·중앙방송)
 - 보고서는 미국과 서방의 위선적인 전모를 발가놓는 고발장으로 될 것이며, 세계 최대의 인권범죄국들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끌어내는 기소장으로 될 것임.
- 北 외무성 대변인, 9월 10일 ‘중통’ 대답을 통해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9.14-10.2, 제네바)에서 미국 주도 ‘북한 인권토론회(전문가들 초청 등) 계획은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있다”고 반발 및 ‘초강경대응’ 천명(9.10, 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